

지구온난화 시대 ESCO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최근 대선정국 이슈에 묻혀 언론에 잘 부각되지 않은 세계적 화두가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최근 선거 국면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정책적 이슈도 단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까닭인지 대선 후보자 간에도 이에 대한 정책 공방이나 눈에 띄는 공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감축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노벨평화상에 지구온난화문제를 다룬 '불편한 진실'의 다큐멘터리영화와 책을 만든 엘 고어와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이하 IPCC)가 공동 수상한 것만 봐도, 지구온난화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의 중요성이 반증된다. 지난 11월 17일 6여년에 걸쳐 연구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제4차 보고서 완결판이 IPCC 총회에서 채택,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환경과 인류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량이 지금처럼 계속 배출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표면온도는 1980~99년 대비 1.1~6.4℃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북극 빙하의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해수면도 21세기 말까지 최소 18cm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980~99년 기준 지구 표면 온도가 1.5~2.5℃ 올라가면 전 세계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난 60년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 책임

은 대부분 인간에게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이미 지구촌사회는 잦은 가뭄과 홍수, 태풍, 전염병 등에 노출되면서 농사피해와 자연재해, 건강악화, 물부족 등 총체적인 불행에 놓이기 시작함으로써 급기야 지구온난화는 인류 생명 자체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 짙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군에 속하는 유럽이나 일본 등 여러 선진제국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적극 활용은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 정책(스웨덴, 뉴질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와 유사한 조세 정책을 도입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도가 ESCO사업, 즉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 제도이다.

ESCO사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활동을 뜻한다. 에너지사용자에게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교체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금융/



글 ·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사무처장

기술 융합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일종의 21세기형 벤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제고를 위해 제1,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 석유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지구온난화 현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 제도 역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9월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SCO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면서인데, 도입당시인 19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7년 현재 158개 기업(대기업 41개, 중소기업 117개)이 참여하여 15년 동안 사업 성장을 이루어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금액으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 9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연간 약 1백만toe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한해에 총 시장규모 2,410억원 규모에 에너지절감 15만6000toe로 CO₂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47만4000톤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금액으로는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ESCO사업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21세기형 지식서비스산업이라 일컬어진다. 고유가 시대에 투자 대비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따라서 시장잠재력도 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ESCO사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 즉 포스트-교토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적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우리나라로서

는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다양한 기제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ESCO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의 일환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산업자원부에서 9월에 제시한 'ESCO 혁신방안'에서 이미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활동 추이를 지켜보아겠지만,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몇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지금까지 158개 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여 효과가 큰 사업, 유망한 기업활동에 대하여 더욱 집중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 또한 중국에는 시장질서에 적응하도록 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자체 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비율을 축소하고, 수익률이 담보되는 사업은 민간자금, 예컨대 최근 거론되는 탄소펀드와 같은 자금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과 자금력을 이미 확보한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ESCO의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산-학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커리큘럼 개발과 투자로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ESCO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단위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별 영역별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